

제 3 1 6 회 임 시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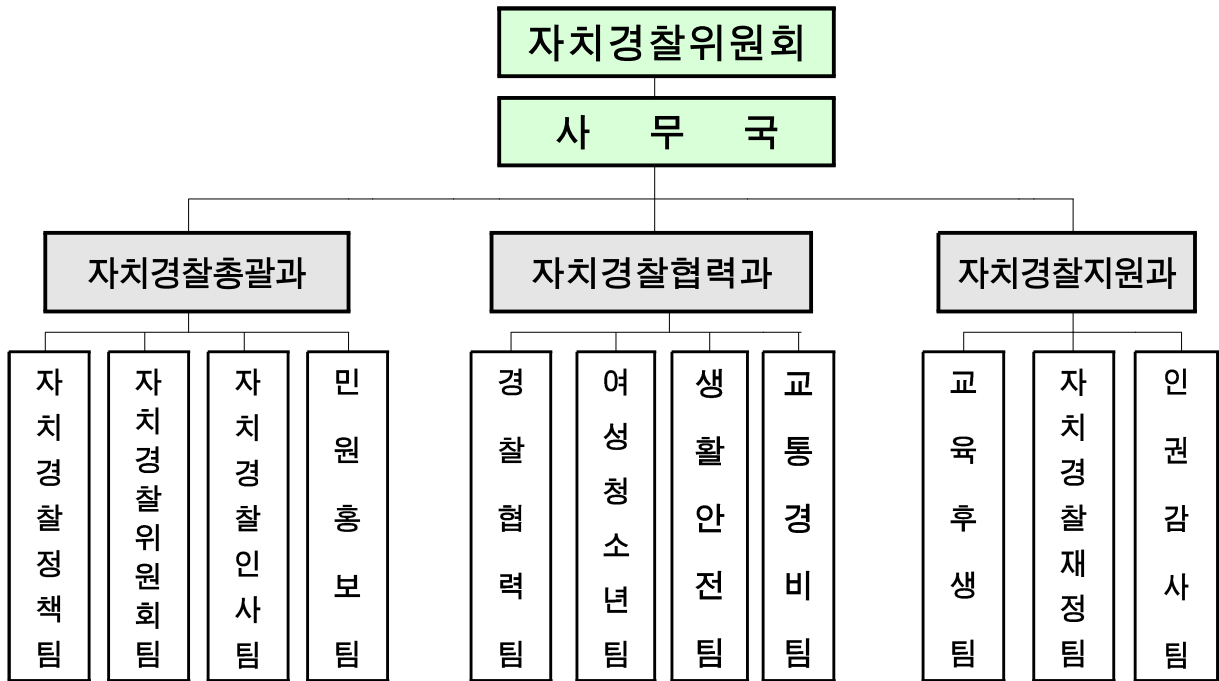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자치경찰위원회

I. 일반 현황

조직 1국, 3과, 11팀



인력 43/57(정원/현원)

(’23. 2. 15. 현재)

| 구분 | 합계 | 일반직 | 정무직 | 임기제 | 경찰관 | 관리운영직 |
|---------|---------|---------|-------|-------|--------|-------|
| 계 | 43 / 57 | 38 / 37 | 2 / 2 | 0 / 0 | 3 / 18 | 0 / 0 |
| 자치경찰총괄과 | 22 / 24 | 18 / 17 | 2 / 2 | 0 / 0 | 2 / 5 | 0 / 0 |
| 자치경찰협력과 | 9 / 20 | 8 / 10 | 0 / 0 | 0 / 0 | 1 / 10 | 0 / 0 |
| 자치경찰지원과 | 12 / 13 | 12 / 10 | 0 / 0 | 0 / 0 | 0 / 3 | 0 / 0 |

※ 정무직 정원 : 자치경찰위원장(정무직 1급), 사무국장(정무직 2급)

※ 경찰관 정원파견 : 3명(총경1, 경정1, 경위1)

※ 경찰관 현원파견(정원외) : 15명(경정3, 경감5, 경위5, 경사1, 경장1)

주요기능

| 구 분 | 담 당 업 무 |
|---------|---|
| 자치경찰총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관리 ○ 자치경찰 시행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 자치경찰협력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력 ○ 자치-국가경찰사무 협력·조정 ○ 자치경찰사무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다중운집행사 지도감독 |
| 자치경찰지원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 ○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사업예산 편성, 집행관리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감찰요구 ○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 시책의 수립 시행 |

예 산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 2023년 | 증 감 |
|-------------|--------|---------|-------|
| 위 원 회 사 무 국 | 20,411 | 23,586* | 3,175 |

※ 본예산 22,388, 이월 848, 특별교부금 350

○ 부서별 예산 : 총 235억 86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 2023년 | 증 감 |
|---------------|--------|--------|---------|
| 합 계 | 20,411 | 23,586 | 3,175 |
| 자 치 경 찰 총 괄 과 | 1,956 | 2,845 | 889 |
| 자 치 경 찰 협 력 과 | 1,064 | 16,061 | 14,997 |
| 자 치 경 찰 지 원 과 | 17,391 | 4,680 | △12,711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현황

○ 위원장 : 김학배

- 상임위원 : 김성섭(사무국장 겸직)

- 비상임위원 : 권성연, 김성태, 이창한, 장전배, 좌세준

○ 임기 : 3년(연임 불가), '21.6.28~'24.6.27

○ 위원 프로필

| 사진 | 성명 | 성별 | 주요경력 |
|---|---------------|----|--|
|  | 김학배 <위원장> | 남 | - (前)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前)대전·울산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수사국장 |
|  | 김성섭 <사무국장> | 남 | - (前)서울중부·경기과주·경남하동 경찰서장 -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 (前)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
|  | 권성연 | 여 | - (現)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 (現)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 (前)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
|  | 김성태 | 남 | - (現)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前)한국경찰법학회 회장 |
|  | 이창한 | 남 | - (現)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現)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연구원 원장 - (現)한국경찰학회 회장 |
|  | 장전배 | 남 | - (前)총포화약기술협회 이사장 - (前)전북·광주·제주지방경찰청장 - (前)경찰청 경비국장 |
|  | 좌세준 | 남 | - (現)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前)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II. 정책 목표

추진방향

- 1 서울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심 치안 서울**」 조성
 >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곳에 치안력 집중, 체감 안전도 향상
- 2 약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 **동행 치안 활성화**
 >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시민참여 활성화
- 3 더 안전한 서울로 가기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실현
 > 실제 지역치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비전체계

비전

자치경찰 2년, 가장 안전한 치안도시 서울

핵심
목표

<안심치안서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동행치안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동행 치안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주요
추진
과제

1.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매력도시 기반 마련
2. 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 관리체계 구축
3.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
4. 운전자·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대책

5. 소외된 약자 없이 누구나 안전한 서울
6.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드는 더욱 안전한 서울

7. 서울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마련
8. 대정부·국회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실현

Ⅲ.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 ①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매력도시 기반 마련
- ② 다중운집행사 및 재난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지원 강화
- ③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로 시민 체감 안전도 제고
-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⑤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2.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동행 치안 활성화

- ① 소외된 약자 없이 누구나 안전한 서울 조성
- ②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 ③ 우리학교는 우리가 지킨다 '대학생 순찰대' 운영
- ④ 치안 유관단체 운영 활성화 및 협업체계 강화
- ⑤ 시민맞춤형 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3.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② 시기별·테마별 맞춤형 치안시책 지휘
- ③ 자치경찰 교육·후생복지 지원으로 市 소속감 및 사기제고
- ④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적극시행

1.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서울 조성

- ①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매력도시 기반 마련
- ② 다중운집행사 및 재난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지원 강화
- ③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로 시민 체감 안전도 제고
-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⑤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1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매력도시 기반 마련

공공장소 등에 대한 안전인식이 전환·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시민 질서준수 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질서 의식의 척도가 되는 기초·안전·교통질서 집중홍보
- 무질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실시
 - ※ (상반기) 여론조성 및 공감대 형성 집중 → (하반기) 개선 미흡분야 집중 단속
- 깨끗하고 질서있는 매력도시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시민홍보)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대상 홍보활동** 추진
 - 기초질서 설문조사 시행 및 중점 개선분야* 관련 반려견 순찰대 등 활용 홍보
 - * 담배꽂초·껌·쓰레기 투기, 무단횡단, 불법전단지 배포 등
- (캠페인) 공공질서 준수의 필요성·효과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등 실시
 - 우측통행·줄서기 등 질서 준수가 필요한 지역·장소*에 집중홍보
 - * 계단, 공연장,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내외 등
 - 간담회 개최, 언론 기고, 카드뉴스 배포 등으로 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
- (집중단속)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 행위 엄정 단속**
 - 이륜차 등 소음 유발 행위 및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법규 준수 유도
 - ▶ (소음) 소음기불법개조 등 차량 단속(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 ▶ (PM) 음주운전, 상위차로 통행, 승차정원 초과 등 고위험 위반행위 중점 단속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꼬리물기 등 압체운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 ▶ 상습 자·정체 구간 및 위반행위 다발 지역 대상 암행순찰차 적극 활용

□ 추진일정

- 캠페인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세부 계획 수립 : '23. 3월
- 교통 합동단속 및 상시 신고기간 운영 : '23. 5월~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2133-9831

경찰협력팀장: 김영준 ☎9832 담당: 송미현 ☎9833

생활안전팀장: 이용길 ☎9847 담당: 이지호 ☎9851

교통경비팀장: 김영준 ☎9842 담당: 정명후 ☎9843

2 다중운집행사 및 재난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지원 강화

다중운집행사 및 재난·사고 등에 철저한 사전대비 및 서울경찰청과 지휘·보고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 확보

□ 추진방향

- 다중운집행사 재난·사고 상황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상황 공유를 위한 서울경찰청 소통·지휘 체계 강화

□ 추진계획

- (다중운집) **중요 다중운집행사 사전대비 및 협력체계 강화**
 - 다중운집행사 주요 내용과 유형 등 이력 전산화 관리
 - 서울시·자치구·소방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확행
 - 사전 대책회의, 행사 중 신속대응 팀 구성, 행사 후 평가회의 도입 등 제도화 필요
- (지휘·소통) 재난·사고상황 등 대비 **서울경찰청과의 지휘·소통체계 확립**
 - 위원회 지휘를 위한 상황파악·자료수집 목적의 서울청 보고체계 협의
 - ▶ 교통 및 안전관리, 긴급구호,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경찰 기능별 상황정보 협조
 - 향후 경찰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개선안에 맞추어 자경위 대응체계 정비
 - ※ 서울청 안전시스템 종합개선TF 추진과제에 '자치경찰사무 보고·지휘체계확립' 포함('23.1.17.)

□ 추진일정

-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 지원내역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23. 3월
-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 지원 지휘**(위원회→서울경찰청) : '23. 3월~

작성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조재광 ☎2133-9831 교통경비팀장 : 김영준 ☎9842 담당 : 강승철 ☎9846
경찰협력팀장 : 김영준 ☎9832 담당 : 송미현 ☎9833

3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로 시민 체감 안전도 제고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

□ 추진방향

-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시설물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효과 증대
- 합동순찰 및 방범활동을 통해 공원 및 공·폐가 등 범죄취약 요인 제거

□ 추진계획

- (환경개선)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통해 치안환경 개선
 - 경찰서·자치구 공모를 통해 '23년 신규사업 지역 4개소* 선정
 - * 강서구 화곡1동, 서대문구 창천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불광2동
 - 조명시설·반사경 등 지역특색에 맞는 시설물 설치
 - 거주자 대상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 및 보완점 분석, 지속 확대추진
 - ※ '22년 사업 사후 설문조사(6月) / '23년 사업 사전 설문조사(7月) 예정
- (공원 합동점검) 지역별 **공원관리자·경찰관이 안전 저해요소 및 방범시설 점검**
 - 한강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시민 방문이 잦은 곳 대상 현장점검(2,264개소, '22년 기준)
 - 점검 결과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개선안 제시, 집중순찰
 - ▶ 비행청소년·취객 점유로 인한 우범화 방지, 시설·구조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
- (공·폐가 점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폐가 증가지역 우선 점검**
 - 정비사업지 공·폐가 관리방식을 기존 경찰서 개별관리에서 서울경찰청 통합 관리방식으로 개선
 - 출입구 봉쇄, 출입금지 표시 등을 통해 범죄요소 사전차단



□ 추진일정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실시 : '23. 3월
- 공원 및 공·폐가 대상 합동점검 추진 : '23. 3월 ~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학교폭력·청소년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집중적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효과성 제고

□ 추진방향

- 교육청(학교) 협업을 통해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적 운영
-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 추진계획

- (일반교육)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범죄예방교육전문가 양성, (사)한국청소년육성회 활용으로 SPO 역할 보완
 - ▶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경찰관 등을 범죄예방교육전문가로 양성하여 인력풀로 활용
- (특별교육) **SPO가 범죄·학교폭력 관련 청소년 등 대상으로 집중 교육 실시**
 - 청소년 범죄 가·피해자 면담 및 특별 범죄예방교육 등 사후관리 집중
 - 청소년 급증 범죄유형 분석 후 필요대상에게 중점교육 및 관리 추진
- (협력강화)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 (정기) 신학기(연 2회)에 맞춰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 및 대응활동 논의
 - (수시) 市-교육청간 협업을 필요한 사안 발생 시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
- (경찰학교 운영)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
 - (시설물 개선)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노후 시설물 개선
 - *노원, 은평, 서초, 동대문, 도봉, 영등포, 강서, 강북, 서대문
 - ▶ 과학수사 체험·시뮬레이션사격 등 청소년 흥미유발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보강
- (맞춤교육) 학교폭력 유형(사이버폭력, 디지털성범죄, 마약·도박 등)별 범죄예방 교육

□ 추진일정

- 자경위·시교육청 정례 간담회 개최 : '23. 2월말
- SPO 신학기 범죄예방 교육 실시 : '23. 3월~

5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엄정단속,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교통안전대책 추진

□ 추진방향

-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정책 발굴 및 체계적인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 어린이 통학로, 이륜차 교통소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점 개선

□ 추진계획

- (이륜차) 이륜차 교통소음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지자체(시·구)-서울경찰청(署)-교통안전공단 합동, 교통소음·불법개조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단속 체계 구축 및 합동단속 실시(분기별 1회)
 - ※ ▲신규 고성능 캠코더 및 임행순찰차 보급·활용을 통한 추적 단속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을 통한 이륜차 무질서 행위(소음·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근절 추진
- (통학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지속 추진
 - 통학로 보·차도 구분 없는 205개 초등학교(352개 구간) 대상 개선 우선순위 검토
 - 시·구·교육기관(학교 포함) 협업을 통한 개선방안(보도확충 및 횡단보도 신설 등) 마련
-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경찰서·전문기관·시민 의견을 반영('22.12월)하여 선정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필요 지역(종로구 안국교차로~공평교차로 등 4개소)에 대한 조기 설치(~'23.6월) 지원
- (CCTV)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내용연수 경과(7년) 장비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민 요구지역 우선 설치
 - 교통사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유관기관(서울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 심의를 통해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효과성 제고

□ 추진일정

- 이륜차 교통소음 근절 대책 수립·시행(합동단속 등) : '23. 2월~
-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 계속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조재광 ☎2133-9831 교통경비팀장 : 김영준 ☎9842 담당 : 김성표 ☎9852

2.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동행 치안 활성화

- ① 소외된 약자 없이 누구나 안전한 서울 조성
- ②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 ③ 우리학교는 우리가 지킨다 ‘대학생 순찰대’ 운영
- ④ 치안 유관단체 운영 활성화 및 협업체계 강화
- ⑤ 시민맞춤형 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1 소외된 약자 없이 누구나 안전한 서울 조성

유관기관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보호

□ 추진방향

- 사회적 약자를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전점검 추진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참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시설점검) 노인·장애인 **보호(거주)시설 합동점검**
 - (노인) 시립 요양시설 전체 점검추진 예정('22년 3개소 → '23년 8개소)
 - (장애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유형별 순차적 점검
 - ※ 시설 현황 : 장애인 거주/지역재활/직업재활/의료재활 시설 등 총 605개소
- (스토킹)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가 공동심의제'** 운영
 - 범죄심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 안전조치의 객관성 확보 및 피해자 관점 반영
- (인신매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1.1.)에 따른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실시
 - *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 등 지표(법 제13조, 여성가족부 고시 예정)
 - 범죄 유형·대상에 맞는 상담 창구·보호·지원기관 및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연계
- (가정폭력) 신속·맞춤 보호·지원을 위한 **APO¹⁾-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 연계**
 - 실시간 정보공유, 가정폭력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집중관리 및 재발방지

□ 추진일정

- 사회적약자 보호시설 합동점검 : '23. 3월~
- APO-소나무센터 상담 시스템 연계 : '23. 3월~

작성 자

자치경찰협력과장 : 조재광 ☎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 박세원 ☎9837 담당 : 이주철 ☎9838
담당 : 최현희 ☎9839

1) APO(Anti-Abuse Police Officer) : 학대예방경찰관(가정폭력·아동학대 전수합동조사,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미취학(예비소집 포함)·장기결석 합동 점검, 시설 내 학대 예방교육·신고 홍보 등 수행)

2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

반려견순찰대 확대운영을 통해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 및 촘촘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대표적 주민참여 치안사업 활성화
- 유관기관 협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순찰 및 정서 지원 활동 병행

□ 추진계획

- (선발·활동) **25개 자치구 대상**(자치구별 50~60명) **선발심사·선정**(’23.4월)
 - 지원동기 등 심사(1차), 반려견 행동확인 및 간단한 명령 수행 등 실습확인(2차)
 -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 중 안전시설물 및 기타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활동 추진
 - 순찰대원 복장 지급, 보험가입 및 교육·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활동력 제고
- (정서지원) **사회적 약자 대상 정서적 지원** 및 지역안전 강화 연계 활동
 - 공동체생활가정 보호아동 등 정서 지원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동물매개치유’ 실시
 - 위기청소년 등 대상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동물매개치유(심장소리 듣기)



경로당 방문 및 말벗 산책



위기청소년 동행 합동순찰

□ 추진일정

- 사업수행업체 선정 : ’23. 3월
- 25개 자치구 대상 반려견 순찰대원 모집 및 선발 : ’23. 4월

작성 자 |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강민준 ☎9810

3 우리학교는 우리가 지킨다 '대학생 순찰대' 운영

대학생 순찰대 본격 운영으로 캠퍼스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여 안전한 대학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대학생순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 모색
- 자경위·대학·경찰서 치안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

□ 추진계획

- (모집) 제2기 대학생순찰대 모집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모집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및 관내 대학교가 있는 경찰서별 적극 협조요청
 - 경찰,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방문협의 등 집중홍보
- (교육) 방법순찰 및 재난대응안전 교육 추진으로 순찰대원 역량강화
 - 캠퍼스 내외 안전한 방법·순찰방법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지진·지하철사고 등 각종 재난 재해 상황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추진
- (운영) 관할 경찰서의 순찰정보 제공, 합동순찰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인근 우범지역 정보교환, 합동순찰 추진 등 대학-경찰 치안파트너십 구축
 - ▶ 경·학 협력 우수사례는 추후 월별 자치경찰 우수사례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지원) 안전확보를 위한 물품·보험 제공 및 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순찰물품(조끼, 경광봉 등)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안전확보
 - 경찰실습 학점제(경찰학과), 경·학 학점 이수제(일반대학) 등 학점 취득방안 협의
- (평가) 대학생 순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간담회 개최 및 표창 수여

□ 추진일정

- 2기 대학생 순찰대 모집 및 발대식 : '23. 4월~
- 2기 대학생 순찰대 활동 및 캠페인 추진 : '23. 4. ~ 12월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김화진 ☎9808

4 치안 유관단체 운영 활성화 및 협업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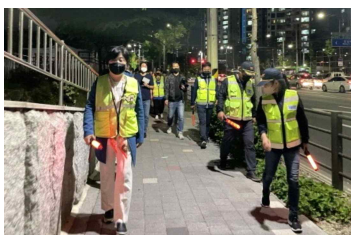
치안 유관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치안 협력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기회 확대 및 협업체계 강화
- 단체 역량강화로 시민이 체감,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 치안봉사 활성화

□ 추진계획

- (자율방범연합회) **방법순찰 활성화** 및 시민행사 질서유지
 -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야간시간 집중 순찰, 안심마을 보안관 등 민·경 합동순찰
 - 각종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 등 방법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침입사고시 대응방법, 순찰안전 점검교육 등
- (모범운전자연합회) **출·퇴근길 러시아워 및 주요행사 시 교통관리 지원**
 - 러시아워 교차로 꼬리 끊기 및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주요행사 교통관리
 - 모범운전자 활동 사진전 개최 등 교통봉사활동 홍보로 시민참여 활성화
- (녹색어머니연합회)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보행권 확보캠페인 전개**
 - 스쿨존, 보행사고다발지역 등 중심으로 교통안전지도 특별 강화 기간 운영
 - 교통지도, 승강기 등 각종 안전사고 대응 녹색어머니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추진일정

- '23년 치안유관단체 보조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23. 3월
- 정기 간담회 개최 및 협력사업 검토 : 매 분기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김화진 ☎9808

5 시민맞춤형 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서울 자치경찰제 정책 기획·추진 과정에 시민을 적극 참여시켜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치안시책 개발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치안문제 및 정책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자문단 운영
- 실질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한 치안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위험요소 발굴) 권역별 우리동네 **치안 사각지대 위험요소 발굴·제안**
 - 권역위원장(반장) 중심으로 주민 및 치안유관단체 활동가와 접촉하여 대상지 발굴
 - 교통안전 및 방범·치안 사각지대, 약자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필요구역 중점발굴
- (정책공모) 시민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정책공모 실시**
 - 서울시 치안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분과별 정책공모 제안
 - ※ 분과위원회(4개) : 사회적약자보호, 교통안전, 범죄예방인프라, 제도개선
- (정책투표) 자치경찰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정책투표방 운영**
 - 자치경찰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 또는 선호도 조사가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투표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 (역량교육) 시민정책자문단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 교육 추진**
 - 자치경찰 이해 및 지역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리더십 강사 및 지역경찰 활용)

□ 추진일정

- 시민정책자문단 권역·분과위원장 간담회 추진 : '23. 3월

3. 자치경찰 제도개선 추진 및 운영 내실화

① '자치경찰권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 시기별 · 테마별 맞춤형 치안시책 지휘

③ 자치경찰 교육 · 후생복지 지원으로 市 소속감 및 사기제고

④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적극시행

1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치안을 한층 개선시킬 수 있는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부동향

- 국정과제 선정('22.7.26),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8.2)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자치경찰권 강화'(국정과제 111번) : 이원화 모델안 마련,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
 -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22.10월~, 7회 개최)
 - '이태원 참사'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23.1.27) 에 자치경찰 이원화 명시, 추진의지 재확인
- '23.2월말 분과위원회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결정 및 경발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
 - 현행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등) 해당 인력을 시·도로 이관(신분전환)하는 안 검토 중

□ 추진방향

-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방향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신속대응 추진
- 자치경찰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 마련 및 적극 건의

□ 추진계획

- (모델안 마련) 제도 취지 및 효과성을 고려, '전면 이원화 보완모델' 건의
 - (자치경찰사무) 시·도경찰청 이하 전체사무(단, 정보·외사·안보 등 국가사무 제외)
 - (경찰조직) 시·도로 시·도경찰청 이하 전체 이관
 - (경찰신분) 지방직화 원칙(서울경찰청 이하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전체 이관 원칙)
 - ▶ 단, 신분전환 미희망자에 대한 임용권한 전체 위임 및 단계적 신분전환
- (건의 및 홍보) 정부·국회 대상 건의 및 시민대상 홍보, 제도개선 동력 확보
 - 정부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대상 설득·건의
 - 릴레이 기사, 지하철 광고 등 홍보를 통한 자치경찰제 개선 공감대 확산

□ 추진일정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 정부 건의 및 시민대상 홍보 : '23. 2월~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9805 담당 : 오병현☎9807

2 시기별·테마별 맞춤형 치안시책 지휘

주요행사 등에 대하여 시기별·테마별 치안시책 수요를 분석 및 점검을 통해 체감안전도 향상

추진방향

- 주요행사 등에 대하여 치안시책을 사전분석 및 언론·시민의견 동향 파악
- 치안상황 맞춘 자치경찰 지휘 실시 및 사후점검을 통한 보완

추진계획

- (사전분석) 각 시기별·테마별 주요 치안시책 수요분석으로 맞춤형 지휘 추진
 - 매년 시기가 특정된 사항, 주요행사 등에 대해 적시 지휘로 선제적 예방치안 강화
- (치안상황 확인) 서울경찰청 보고사항, 언론보도, 시민의견 등 동향 파악
 - 성범죄, 아동학대, 교통사고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상황 확인 및 지휘 검토
- (지휘추진) 시민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지휘가 필요할 경우 **안전상정 지휘**
 - ※ 단,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울경찰청장 재량 처리 후 보고 조치
- (사후점검) 치안시책 지휘에 따른 **서울청 추진사항 점검**, 차후 지휘사항에 반영
 - 성과점검을 통해 보완시책 지시 및 우수사례 등 전파, 차기 지휘에 반영

〈 2022년 시기별 또는 주요 행사 지휘내역 〉

| 구분 | 안전명 | 관련분야 |
|-----------|------------------------------------|------------------|
| 명 절 | 설 추석연휴 시민편의 증진계획 수립 지휘 | 교통, 생활안전 |
| 연 말 연 시 |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 교통 |
| 해 병 기 | 해빙기 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 방안 수립 지휘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
| 하 계 · 동 계 | 하계동계 휴가철 지휘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지휘 | 여성·청소년 |
| | 겨울철 강설 대비 교통관리 대책 등 지휘 | 교통 |
| 수 능 |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 여성·청소년 |
| 행 사 | 2022년 제아의 종 타종행사 등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 생활안전, 교통 |

추진일정

- 시기별·테마별 주요 치안시책 수요분석 : 상 시

작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 ☎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정명이 ☎9805
 담당 : 오병현 ☎9807
 자치경찰협력과장 : 조재광 ☎2133-9831
 경찰협력팀장 : 김영준 ☎9842
 담당 : 송미현 ☎9833

3 자치경찰 교육·후생복지 지원으로 市 소속감 및 사기제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선 자치경찰의 후생복지 지원 및 대상자별 다양한 교육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경찰 연차별 후생복지 확대를 통해 市 직원-자치경찰 간 격차 해소
- 자치경찰제 인식 제고를 위한 市 직원·자치경찰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

□ 추진계획

- (후생복지)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속 지원**
 - 서울시 자치경찰 4천명(시장 임용권 범위 내)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
 - ※ 인사권·직제(재)조정, 타 시·도 현황 등 고려하여, 향후 지원 대상·범위 확대 검토
- (환경개선) 자치경찰 **근무현장 실사 등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최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실사·설문조사 등 시행
 - 시설 환경정비, 공기청정기·사무가구 등 필요물품을 수요에 맞춰 수시 지원
- (현장교육)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자치경찰 인권 현장 교육 확대 추진**
 - 경찰서별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운영('22년 6회 → '23년 10회 예정)
 - 시민 대상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자치경찰제·인권보호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 확대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市 직원(인재개발원), 자치경찰(서울청 게시판, 직장교육) 대상 교육 수강 독려
 - '자치경찰·인권 관련 치안 우수사례 중심' 온라인 콘텐츠 신규 개발

□ 추진일정

- 맞춤형 자치경찰·인권 현장교육 실시 : '23. 1월 ~
-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 '23. 4월 ~
- '23년 자치경찰·인권 관련 온라인콘텐츠 신규 개발 : '23. 4월 ~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낙현 ☎2133-9854 교육후생팀장 : 김훈기 ☎9855 담당 : 구혜림 ☎9857
장재완 ☎9858

4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적극시행

서울경찰관서(자치경찰사무 기능)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정책의 현장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효율적인 감사 운영 및 결과 처리로 감사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 서울경찰청(청문)과 감사 일정 사전 조율 및 합동 감사 실시로 중복 감사 예방
-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문제점 진단, 개선점 도출**

□ 추진계획

- (종합감사) **종암경찰서 등 10개 경찰관서 대상 실시**(감사 주기 : 3년)
 - 감사인원 : 인권감사팀장 및 소속 직원 필요 시 타 부서 인력 등 참여
 - 감사내용 : 자치경찰사무 전반 적법·타당성,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 제시
 - ※ 시민인권 보호 공로 자치경찰 공무원(‘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정·표창(매월)
- (특정감사) **현안·이슈 발생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안**

| 구 분 | '23년(안) | | '22년 | '21년 |
|------|--|--|------------------------------------|---------------|
| 계 | 10 | | 11 | 2 |
| 종합감사 | 상반기(5) | 하반기(5) | 9 (성북·서부·중랑·강동·동작·마포·혜화·영등포·관악) | 2 (서초, 양천) |
| | 종암(3월), 강서(4월), 서대문(5월), 남대문(6월), 광진(7월) | 도봉(8월), 동대문(9월), 강북(10월), 은평(11월), 강남(12월) | | |
| 특정감사 | 현안·이슈 발생 시 | | 2 (지하철·한강경찰대) | - |

※ ('22년 감사 결과) 총 53건의 업무 개선사항 지적·조치 / 수범사례 표창 총 26회

□ 추진일정

- '23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운영 계획 수립 : '23. 3월
- 감사 우수사례 발굴 및 으뜸 자치경찰 공무원 표창 : 매월

작성 자 자치경찰지원과장 : 최낙현 ☎2133-9854 인권감사팀장 : 김경진 ☎9871 담당 : 이종행 ☎9873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건

○ 조치내역

| 구 | 분 | 계 | 완 료 | 추진 중 | 검토 중 | 미반영 |
|---|------------|----|-----|------|------|-----|
| 계 | 계 | 28 | 10 | 18 | 0 | 0 |
| | 시정· 처리요구사항 | 14 | 2 | 12 | 0 | 0 |
| | 건의 사항 | 10 | 4 | 6 | 0 | 0 |
| | 기타(자료제출 등) | 4 | 4 | 0 | 0 | 0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 자치경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음. 따라서 서울시, 각 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서울경찰청 등의 재난 관리 조직·시스템 개선안에 맞추어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체계 정비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위원회 소집 및 지휘 심의·의결 필요성 판단을 위한 상황파악·자료수집 목적의 보고체계를 서울경찰청과 검토 및 협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보고체계 협의 ('23.상반기) |
| <p>○ 행사주최가 없다는 것이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주최자 여부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시민이 운집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당연 경찰에 있기 때문임. 이를 반성하고 시정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재강조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2차('22. 11. 23.): 월드컵 거리응원('22. 11월 ~ 12월 4회) 안전관리 지원 ▲제65차('22. 12. 20.): 제아의 중 타중행사('22. 12. 31.) 안전관리 지원 ※ '22. 6. 29. "다중운집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제 2022-315호)"를 의결하여 서울경찰청에 상황별 대책을 수립·시행 既 지시 ○ 경찰청 경비부서에서 다중인파관리를 위한 '혼잡경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매뉴얼 제작 등 추진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결과 취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다중운집행사 안전 강화를 위한 심의·의결 및 유형별 사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서울경찰청 지원 지휘 - 주요 행사내용과 유형별 경찰개입 규모 등을 이력화 관리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 정부·지자체(서울시, 용산구청) 차원의 재난컨트롤타워가 모두 부재했고, 이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관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사의 원인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등 안전관리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관부서의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요청시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 지원 지휘(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각종 행사시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및 자체 상황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거리응원('22.12월), 제야의 종 타종행사('22. 12. 31.) 등 안전대응상황반 기 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 시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협의 (서울경찰청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개선 논의 등으로, 결과에 따라 상호 대응체계 정비) ○ 서울경찰청과 관계 증진을 위한 간담회 등 소통강화 |
| <p>○ 참사 이후 여러 책임자들이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 관리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했음.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다중 밀집인과 안전관리 관련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임 ○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위의 대책 등을 반영, 경찰과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 <p>○ 자치경찰 대상 저조한 교육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람. (자치경찰지원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자치경찰 대상 온라인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서울청 소속 경찰서별 직장교육 시,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협조('22.11월) - 서울청 온라인 게시판에 핵심 교육콘텐츠* 요약본 게시('23. 2월~) <p>* 자치경찰제도로 서울시를 더 안전하게!!(10분), 자치경찰과 인권(17분)</p>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대상, 맞춤형 자치경찰&인권 현장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학교」 현장교육 : 총 7회*, 384명 교육 * 중랑, 남대문, 강동, 중부, 혜화, 동작, 강남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제작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경찰서별 자체 직장교육 시행 시,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 진행 - 서울청 온라인 게시판에 핵심 교육콘텐츠* 요약본 지속 게시 ※ '23년 신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23. 4~9월), 운영 예정 ○ '23년 '찾아가는 자치경찰·인권 학교' 지속 운영(총 10개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만들어주기 바람. (자치경찰총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등 안전관리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관부서의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요청시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 지원 지휘(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 각종 재해·재난 시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및 자체 상황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컵 거리응원('22.12월), 제야의 종 타종행사('22. 12. 31.) 등 안전대응상황반 기 운영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 시 서울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협의 (서울경찰청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개선 논의 중으로, 결과에 따라 상호 대응체계 정비) ○ 서울경찰청과 관계 증진을 위한 간담회 등 소통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낮은 점수가 나왔음. 수직적 조직문화, 부정확한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부당성 등을 개선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청렴도 향상계획 수립('2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내부 직원 대상 정보매체인 서.자.경.지에 청렴에 대한 특보 편성, 청렴교육 전원 조기 이수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지속적인 노력해주길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청렴점검TF 운영('22.8월 ~) ○ 자치경찰 주니어보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연차·젊은 직원 총원 대상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의안건 수합 후 대표회의(6인) 진행, 회의결과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 의견 회신 - 1회 회의('22.9월): 단체 카카오톡방 축소 운영, 간부회의 주기 변경(주간→월간), 내부 조직 및 인사 관련 건의사항 등 위원회 내 청렴 현안 개선 조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점검 TF 연중 상시 운영 ○ 분기별 자치경찰 주니어보드 회의 개최 |
| <p>○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지구대, 파출소, 교통정보센터 등 시설의 심각한 노후도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지원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자율방범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범대원 복제 등 지원 관련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 추진 : 3회 ('21.7.21., '21.8.9., '22.10.4.) ○ '23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예산(민간경상보조) 중 방법대 순찰복 지원비 일부 반영: 20,460천원 <p>[자치경찰 근무환경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서울청 실무협의회 안전 상정('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대·파출소 리모델링 지원' 관련 기관 간 의견 교환 ○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재산현황 전수조사('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 재산 여부, 유휴공간 활용 상황 등 ○ 자치경찰의 노후·협소한 시설 개선 및 기본물품 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경찰대 등 근무공간 리모델링(주방·화장실·건물 외부 등), 공용차량 주차료, 공기청정기·사무용 집기 등 수시 지원 ○ 사유재산에 위치한 지구대·파출소 등 근무환경 개선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 재산교환 관련 업무 협의(市 재산관리과) - 사유재산인 지구대·파출소 리모델링 관련 협의(서울청)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자율방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법연합회 간담회 추진('23.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된 방법대원 복장 표준안 마련 및 단계적 지원 논의 ○ 자율방법대 복제지원 계획 수립('23. 7월) [자치경찰 근무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근무환경 현황분석 및 개선 방향 검토('23. 2월) ○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 계획 수립(~'23. 4월) ○ 자치경찰 근무환경 2차 전수조사 실시('23. 하반기) ○ 기재부-서울시 국·공유 재산 맞교환 상황 모니터링(계속) ○ 자치경찰의 노후·협소한 시설 개선 및 기본 물품 부족 지원(계속) |
| <p>○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한 바가 있음. 주최자, 다중운집행사 정의 등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다중밀집인과 안전관리 관련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임 ○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위의 대책 등을 반영, 경찰과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 <p>○ 주최 존재 유무와 관계없음에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를 주최가 있는 경우로만 과소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했음. 다중운집행사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라 제도적 공백이</p>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지원 재강조 지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제62차('22. 11. 23.): 월드컵 거리응원('22. 11월 ~ 12월 4회) 안전관리 지원 ▲제65차('22. 12. 20.): 제야의 종 타종행사('22. 12. 31.) 안전관리 지원 </div> ※ '22. 6. 29. '다중운집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제 2022-315호)'를 의결하여 서울경찰청에 상황별 대책을 수립·시행 既 지시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있었다며 해명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경비부서에서 다중인파관리를 위한 ‘혼잡경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매뉴얼 제작 등 추진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결과 취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다중운집행사 안전 강화를 위한 심의·의결 및 유형별 사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서울경찰청 지원 지휘 - 주요 행사내용과 유형별 경찰개입 규모 등을 이력화 관리 |
| <p>○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서비스 등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각 사업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고 마을의 치안, 방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보안관 및 자율방범 협업 관련 회의('22.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석 자 : 자치경찰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장, 각 사업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안심마을보안관과 자율방범대 업무 협업 ○ 안심마을보안관-자율방범대 유사중복성 보원을 위한 사전협의('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도 운영방안 수립시 상호간 사전협의, 안심마을보안관 선발 시 자율방범대원 신청 홍보, 초소 공동사용, 합동순찰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계획(1인가구담당관-632호(23.1.13.)) 위원회 보고안건 상정('23. 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선정 및 범죄예방활동 기초자료 공유, 자율방범초소 및 지구대·파출소 유희공간 사용 협조요청 등 |
| <p>○ 이태원 참사의 공식적인 참사 발발 시간은 10월 29일, 22시 15분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시 30분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고 참사를 처음 인지함. 서울시와 경찰청의</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2.12월까지 총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가교역할을 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하고 거꾸로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청 내 위상이 보잘 것 없으며 역할은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것. (자치경찰총괄과)</p> | <p>28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타시도 협의(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안전 상정) ○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방문 - 언론기고, 홍보영상 및 지하철 게시물 등 홍보물 제작 |
| <p>○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점은 참사 발생 다음 날 오후 3시임.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는 결과임.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체계의 정비 및 개선 필요.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관한 동향보고 등 행자위 전문위원실에 서면보고 등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재해·재난 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개선 논의 중으로, 결과에 따라 상호 대응체계 정비 ○ 시의회, 유관기관 등에 각종 상황발생시 즉시보고 시스템 마련 |
| <p>○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1. 지구대, 파출소 등의 현장 업무가 자치경찰소관으로 이전 2.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 3. 인사권의 독립과 실질적 임용권의 수행 등이 절실함.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행안위에 건의 1건 보낸 것이 전부임. 위원장은 2022년 출장 26</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2.12월까지 총 28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회 중 반려견 순찰대 관련 업무가 5건임. 반려견 순찰대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위원회의 상황에서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때임. 현장 업무의 이전,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인사권의 독립 등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전략의 수립을 요함. (자치경찰총괄과)</p> |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타시도 협의(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안건 상정) ○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위 위원 방문, 언론사 활용 릴레이 기사 게재, 홍보물 제작(지하철 게시물 및 영상 등) |

건의사항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경찰법 및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통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로 되어 있음. 하지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아직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음. 교통안전심의회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옮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교통안전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권한이관 관련 협의('21.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운영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이 어려움 ※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 기존 서울청 위주의 교통안전심의회 위원 인력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위원(자치경찰협력과장) 참여 확대('22.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심의회 위원 총 29명 중 서울시 관련부서 과장급 3명(자치경찰협력과·교통운영과·보행자전거과) 포함, 활동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적극 참석(분기 1회 이상) ○ 정기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효과성·적절성 개선 도모 |
| <p>○ 사건 발생 시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2.12월까지 총 28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타시도 협의(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안건 상정) ○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방문 - 언론기고, 홍보영상 및 지하철 게시물 등 홍보물 제작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학교폭력 예방에 투입되는 인원(SPO)은 133명인데 이들이 담당하는 학교는 1400여 개. 1명당 담당 학교가 1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 실효성에도 의문이 감. 개선책이 필요함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위원회-서울청-교육청) 실무자 간담회 개최('22.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학교별 '범죄예방교육 서포터 운영'사항 논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 부족을 보완하는 범죄예방교육전문가 양성, 일반적·기본적 범죄예방교육 실시 - SPO 중심의 범죄청소년,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 등 대상 특별예방 교육 및 가·피해학생 집중적인 사후관리 추진 |
| <p>○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CCTV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함. SPO가 항시 CCTV를 주시하고, 사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행정을 할 것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학교 내) 및 지자체(학교 밖) 대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O의 CCTV 열람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관리주체인 교육청(학교)과 지자체에서 학교내·청소년 주요 활동 구역 (학원가·PC방·공원 등), 비행다발구역에 대한 CCTV 모니터링 강화 요청 -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범죄·비행 등 발견시 즉시 경찰 통보, 현장 출동하여 선도·검거토록 지휘하겠음 |
| <p>○ 서울 자율방범대원 활동 과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그런데 안심마을보안관(18억) 대비 서울자율방범대(1억)에 대한 예산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민간경상보조) 예산: 2억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예산 1억원 대비 150% 증액 편성 ○ (증액사유) 자율방범 활동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그간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였으나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비를 신규 편성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보임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예산 신규편성: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직접 지역치안활동을 수행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 대학생 순찰대 확대 운영('2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5개 대학 → 10개 대학으로 확대운영 추진 ○ '안전한 서울 만들기 우리도 동행!' 치안 유관단체 맞춤형 협력 추진('2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법연합회 : 방법순찰 활성화 및 질서관리 협력 - 모범운전자연합회 : 러시아워 및 주요행사 교통관리 지원 - 녹색어머니연합회 : 스쿨존 등 교통안전지도 특별 강화 협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순찰대 및 대학생 순찰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23. 1월~) ○ 치안 협력단체(자방, 모범, 녹색) 간담회 추진(분기별) ○ 치안 유관단체 공동체 치안 활성화 계획 수립('23. 2월~) |
| <p>○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소속으로 만들어진 것임. 금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매뉴얼, 조례 규정 탓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 국회 현안질의시 시장이 참사 결과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 ○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다중밀집인파 안전관리 관련 TF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임 ○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위의 대책 등을 반영, 경찰과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이태원 참사 유실물 처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기간을 1주일로 짧게 지정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행정편의적으로 조치한 것. 현장에서는 유실물을 찾아가는데 혼선이 있다고 하므로 챙겨주기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참사 관련 유실물 관리에 관한 지휘 ('22.11.9.) ○ 이태원 참사 유실물 처리 기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이 협의하여 용산 원호 다목적 체육관을 유실물 임시 보관소로 지정, 집중 관리함. - (연장 운영) 유족·피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체육관 시설의 운영기간 연장 요청하여 2주간 연장운영 - (이관조치 및 보존기간 최대 확보) 유실물 등의 안정적 보관·관리를 위해 용산경찰서 서고(항온·항습 기능 설비)로 이관, 반환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초기에 24시간 운영하여 현장 반환을 최대한 진행하였음. - 보존기간은 유실물법상 습득 6개월 후 처리 대상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유품·유실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을 적용하여 수사종결시까지 최대한으로 보관할 예정임. ○ 유실물 반환에 대한 혼선 과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와 관련된 유류 물건은 수사과에서, 일반 유실물 등은 생활안전과에서 보관·관리함으로써 유가족 등이 유실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 - 현재는 용산경찰서 임시 유실물 보관소에서 일괄 보관 중이므로 반환 시 혼선은 해소되었음 - 수집된 유실물 중 31.6% 반환, 남은 유실물은 Lost112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종결 시까지 유실물 보관, 반환 업무 계속 진행 예정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디지털성범죄 업무는 시 소관이라는 자치경찰 위원회의 답변을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조례상 성범죄 예방은 자치경찰 사무 이므로,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람 (자치경찰협력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주관 현장방문간담회(‘22.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민원봉사실 근무 경찰관 대상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안내 및 연계 방법 교육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발생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업, 연계하도록 지휘(‘22.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근절 및 예방활동 추진대책 수립 건 관련 업무내용 통보’(22.6.21.)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센터로 연계하여 피해 영상 삭제·차단 지원 ○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매 및 경찰관서 배부(‘22.5.), 점검활동 전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 예방 위한 교육·홍보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 포함(상·하반기 신학기)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보활동·캠페인 추진 ○ 신학기, 명절, 하계 피서철 등 불법촬영 점검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 민간 요청시 장비 적극 대여 - 불법촬영 탐지장비 추가구매 예정(‘23 상반기) |
| <p>○ 자치경찰위원장이 해야할 일은 자치경찰사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임. 행사장 다니는 것은 줄이고,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 (자치경찰총괄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및 진정한 자치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현황)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하여 ’22.12월까지 총 28회 국회 및 정부대상 건의 추진 - (건의내용)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재원 마련, 시·도 임용권 내실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신속 도입 촉구 등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타시도 협의(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안건 상정) ○ 정부 및 국회 대상 지속 건의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방문 - 언론기고, 홍보영상 및 지하철 게시물 등 홍보물 제작 |